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일등 공기업



2022년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2.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추진 체계	2
III. 추진 현황	3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4
V. 인권영향평가 결과	7
VI. 향후 계획	11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부직원,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긍정 혹은 부정적 요소들을 분석·점검하여 공단 인권경영 정책 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I 추진 개요

1 추진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윤리경영, 인권경영」지표 이행
- 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 제32조(인권영향평가)
- 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 제34조(인권영향평가)
- 2022년도 인권경영 추진 기본 계획 : 경영지원실-99(2022.01.04)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 경영지원실-6800(2022.11.08)

2 추진배경

- 조직 내외부의 부패, 비리,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위기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점검 시스템 마련
-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선도적 역할 요구 증대
- 인권신장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향상

3 추진개념

-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 절차
 -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측정
 - 인권에 부정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공단의 인권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실사)를 위한 핵심 도구
 -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의 위험요소 관리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창출로의 기회로 인식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사업(기업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특정사업)

II 추진체계

1 인권경영 추진방향

비전	인권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지방공기업			
미션	인권신장 최대화와 인권침해 최소화			
전략	인권경영시스템 기반 구축	인권영향평가 운영	인권경영체제 실행	인권침해구제
목표	인권경영체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공개	구제절차 제공
추진방향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조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독립성 확보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인권경영 실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세부과제	-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	-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선정 - 인권영향평가결과 피드백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 인권침해 방지조치 수립 - 인권경영 전과정 공개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구제절차 평가 및 개선 - 불합리한 규제 발굴 - 갑질근절 예방교육 강화

2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기획감사팀
- 담당관 : 경영지원실장(행동강령책임관 / 부정청탁방지 총괄담당관)
- 담당자 : 기획감사팀 감사담당자

3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장 1인포함 총 7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주요경력	구성기준	비 고
내부 위원	위원장	김 * 훈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본부장	당연직	직무대행
	위 원	김 * 술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환경복지본부장	당연직	
	위 원	류 * 희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제1노조	
	위 원	윤 * 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제2노조	
외부 위원	위 원	권 * 인	「변호사 권오인법률사무소」 대표	외부전문가	
	위 원	김 * 재	「노무법인 경북」 대표	외부전문가	
	위 원	김 * 엽	안동과학대학교 스포츠레저과 교수	외부전문가	

III 추진 현황

1 주요 추진실적

일 자	추진 내용	비고
2018. 11. 13.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2018. 12. 3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지침 제정	
2019. 01. 21.	제1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내부4명, 외부2명
2019. 02. 1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	
2019. 10. 21.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0. 12. 15.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1. 01. 22.	제2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내부4명, 외부3명
2021. 09. 2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시행내규 제정	
2021. 11. 26.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2. 12. 02.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2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항 목	답변 결과	지적 사항	개선 내용
기관 운영	고용상의 비차별 (2-5)	보완필요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일반직 역차별 해결 등 전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미흡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통한 차별적 복리후생 관련 지속적 확인검토 및 단계적 개선 추진중
	직장 내 인권보호 (3-1)	보완필요 폭력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및 기타 지침 미흡	성희롱·성폭력예방 시행내규 제정,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신설 등 규정 제개정 완료
	산업안전보장 (6-8)	보완필요 오염물질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외부고지 요구	공단 홈페이지에 전일 수질분석 결과 정보 게시 등 적극적 외부 고지 실현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3)	보완필요 간판, 팸플릿 등의 생산에 있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장치 필요	지적 재산권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시 관련내용을 업체에 통보
	환경권 보장 (9-3)	보완필요 견고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관련사항 지속적 훈련 필요	부서별 연간 비상연락망 체계 운영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중
	소비자인권 보호 (10-1,10-3,10-5)	보완필요 부서별 개인정보 파기체계, 관리 책임자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소비자 정보수집 관리지침에 대한 보완 필요	부서별 장기보관 기록물 파기에 대한 예산 확보, 철저한 인수인계 이행, 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 등 보완중
	구제조치 노력 (11-4)	보완필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피해자 신상 노출 발견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를 통한 내외부 고객들의 신상보호 실천중

항 목		답 변 결 과	지 적 사 항	개 선 내 용
주요 사업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2-1,2-2,2-4)	보완필요	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BF인증 규격충족 비율을 높일 필요	부서별 BF 인증기준에 준하는 시설개선 단계적 시행중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 (3-1)	보완필요	온천을 제외한 시설에는 심장 자동 제세동기 비치 필요	관련예산 확보에 따라 구입예정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보호 (4-1)	보완필요	각 시설의 전용 휴게 시설로서의 기능 부족	휴게시설 정비관련 순차적 예산 확보 및 기능보완중

IV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인권영향평가 추진 과정

-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파 [경영지원실-7839(2021.12.28.)]
- 2022년도 인권경영 기본 계획 수립 [경영지원실-99(2022.01.04.)]
- 2022년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경영지원실-4256(2022.07.11)]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경영지원실-6800(2022.11.08.)]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무회의 개최 [경영지원실-6855(2022.11.10.)]

②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구 분	추진 내용				
2021년 인권영향 평가결과 피드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21년 지표(64개)		2022년 지표(171개)		
	NO	체크리스트(지표수)	NO	체크리스트(지표수)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0)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30)	지표수 107개 증가
	2	고용상의 비차별(9)	2	고용상의 비차별(13)	
	3	직장내 인권보호(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6)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4	강제노동의 금지(11)	
	5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7)	5	아동노동의 금지(14)	
	6	산업안전보장(9)	6	산업안전보장(18)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1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10)	
	9	환경권 보장(6)	9	환경권 보장(18)	
	10	정보 인권보호(5)	10	소비자인권 보장(12)	
	11	구제조치 노력(5)	11	정보인권 보장(5)	
			12	직원인권 보장(14)	

구 분	추진내용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21년 지표(21개)		2022년 지표(15개, 6개 감소)		
	NO	체크리스트(지표수)	NO	추가 지표	비고
	1	운영의 공정성 확보(4)	1	운영의 공정성 확보(4)	지표수 6개 감소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5)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2)	
	3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4)	3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3)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3)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3)	5	지역환경 및 주민보호(3)	

3 평가개요

○ 평가기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2022. 11. 15. ~ 11. 25.(11일)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022. 11. 28. ~ 12. 02.(5일)

○ 평가방법 : 위원별 체크리스트 점검

○ 평가내용 : 공단 경영활동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영향도 평가

○ 평가기준 : 지표별 추진실적의 충족 정도를 평가(정성적)

○ 평가절차

- 평가지표설정 ⇨ 평가자료 검증 ⇨ 인권경영위 제출심의 ⇨ 결과보고

○ 평가위원 : 총 7명(인권경영위원회)

- 내부위원 : 4명(본부장 2명(당연직), 노동조합대표 2명)
- 외부위원 : 3명(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교수 1명)

○ 평가항목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2개 분야 171개 지표(전년대비 107개 지표 증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구 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30)	권 * 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2	고용상의 비차별(13)	김 * 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6)	윤 * 일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4	강제노동의 금지(11)	류 * 희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5	아동노동의 금지(14)	류 * 희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6	산업안전보장(18)	김 * 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구 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10)	김 * 엽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10)	김 * 엽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9	환경권 보장(18)	김 * 엽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10	소비자인권 보장(12)	권 * 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11	정보인권 보장(5)	권 * 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12	직원인권 보장(14)	김 * 재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5개 분야 15개 지표(전년대비 6개 지표 감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1. 복지시설(주차관리) 2. 복지시설(수도검침)	1	운영의 공정성 확보(4)	권 * 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2)	김 * 재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3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3)	김 * 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3)	윤 * 일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류 * 희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5	지역환경 및 주민보호(3)	김 * 엽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 세부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체크리스트 작성
 - (1차) 평가: 평가 지표별 담당자 및 담당위원(인권경영위원) 심사
 - (2차) 평가: 1차 평가를 토대로 전체위원 공유 및 최종평가(비대면 회의)



- 체크리스트 내 지표 문항별 5단계로 부여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지표별 1 ~ 9등급 부여

- 평가점수: 체크리스트 내 문항 부여점수

구 분		판 단 기 준	조 치 내 용
판단	점수		
예	2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속적 모니터링
보완 필요	1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 향후 보완 필요
아니오	0	· 지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진전이 없는 경우	· 추진계획 필요
정보 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의 실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 정보 수집계획 필요
해당 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이 공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 등급체계: 등급별 백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백분율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V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 평가 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30)	30				
2	고용상의 비차별(13)	1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6)	16				
4	강제노동의 금지(11)	11				
5	아동노동의 금지(14)	3				11
6	산업안전보장(18)	18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10)	10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10)	3	1			6
9	환경권 보장(18)	15	2			1
10	소비자인권 보장(12)	12				
11	정보인권 보장(5)	5				
12	직원인권 보장(14)	14				
합 계		150	3			18

○ 종합 의견

결과 그래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점수표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8.5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00	0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5.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0
6	산업안전보장	100	5.6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	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87.5	4.2
9	환경권 보장	94.1	2.5
10	소비자인권 보장	100	-
11	정보인권 보장	100	30
12	직원인권 보장	100	-

-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8.5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지표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분야가 다른 분야의 지표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항목 번호	평가 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견
8	김*엽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8-8)	·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적극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단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진행 시 관련 내용을 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부서별 담당자 지정 및 전 직원 대상의 정기적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항목 번호	평가 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견
9	김*엽	환경권 보장 (9-16)	·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공단에서는 부서별 연간 비상연락망 체계 운영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를 하면서 해당 지역 및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서별 현지 주민의 대피 및 대응협조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9	김*엽	환경권 보장 (9-18)	· 부서와 병원 간의 거리가 먼 경우, 부서별로 현실적인 예산 및 공간확보, 인력구성 등의 문제로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 및 의료진 확보가 힘든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긴급의료장비 비치와 소방서 및 지역병원과의 긴밀한 비상연락망 확보를 권고함

[기관 인권영향평가 총평]

- ▶ 금년도 인권영향 평가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공단 및 각 사업장의 운영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추가 발굴하여 예년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함.
- ▶ 공단은 12개 이행원칙 171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예” 및 “보완필요”인 지표개수가 153개로 기관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또한 지표수가 증가하였으나 평가결과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점은(91.9 → 98.5) 기존의 지표에 대한 개선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단의 인권정책과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이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정적 지표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음.
- ▶ 또한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및 ‘환경권 보장’ 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②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 평가 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운영의 공정성 확보(4)	4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2)	2				
3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3)	3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3)	2	1			
5	지역환경 및 주민보호(3)	3				
합 계		14	1			

○ 종합 의견

결과 그래프	점수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3.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 100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83.3 5. 지역환경 및 주민보호 100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6.7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0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100	30
	3	개인정보 및 이용안전 보장	100	12.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83.3	△6.7
	5	지역환경 및 주민보호	100	0

-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96.7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분야가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함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항목 번호	평가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건
4	윤*일 류*희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4-2)	· 수도검침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기능이 제한적인 간이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검침원들의 충분한 휴식 확보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이 요구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평]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개 사업장(주차관리, 수도검침)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고 평가지표는 지난해보다 6개 줄었으며 자가점검 형식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5개 이행 원칙 15개 지표 중, “예” 및 “보완필요” 지표가 15개로 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공단 전체 사업장 수에 비해 주요사업 평가 대상부서가 비교적 적게 선정된 부분은 아쉬우며 가능한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체크 리스트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의 정기적 회의실시로 인권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취합·개선 하는 등 인권영향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인권영향평가 결과 회의(부서 담당자 참석)

VI 향 후 계 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공유 : 2022년 12월말
 - 공단 소식지 및 타 공공기관 전파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협의
 - ▷ 실질적인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2023년 1월
 - 금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평가제도 개선회의 : 2023년 4월
 - 체크리스트 지속 발굴 및 적용 등
 -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 평가 노하우 강화

붙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붙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업체, 지역 주민, 고객 등 공단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지역 내 공공기관, 거래회사, 입주업체 등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인권보호) ①회사는 임직원이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상호간에 언어·신체적

폭력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이하 “인권침해 행위”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회사는 임직원 간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③회사는 특정 임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임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공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은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공단은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은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산업안전보장) ①공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공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9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공단은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③공단은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한다.

④공단은 사업 진행 중 공단 및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①공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보호해야 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공단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①공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한 물질과 소음 등으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환경문제에 대해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②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공단은 경영활동 중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제조치 노력)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공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 (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책임관) ①이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인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행동강령 책임관이 인권경영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②인권경영책임관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침해사건 상담 및 신고 접수
3. 그밖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③인권경영책임관은 공단의 정책제도의 인권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인권침해 사항 발견 시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는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및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공단은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 활동 중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공단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2. 교수, 변호사 등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공단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본부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임 할 수 있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7.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8.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단 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 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위원회 위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고자의 신분이 무단으로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조치) ①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토록 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4조(인권영향평가) ①공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 부서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2021. 9. 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